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전국 혁명론 변화*

김태경** · 이정철***

- I. 서론
- II.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도기론
- III. 조선노동당규약 전국 혁명론 변화: 과도기론 규정 변화
- IV. 2021년 조선노동당규약 전국 혁명론 변화와 김정은 시대 새로운 전략적 노선
- V. 결론

국문요약

올해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은 김정은 정권 경제 개혁 조치,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며,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과 관련된 내용 변화가 주목된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규약 9차례 개정안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 이르는 당규약의 과도기론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북한의 과도기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전국적 범위'의 혁명, 조국통일에 대한 이론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사회주의 혁명과 남반부를 포함한 전국 혁명론의 규정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 및 담론 변화의 맥락에서 북한의 과도기론의 변화를 해석한다.

주제어: 조선노동당규약, 과도기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국 혁명론, 김정은 시대,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 본 논문은 2021년 통일부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

** 제1저자,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I. 서론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도기 문제는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론과 직결되는 이데올로기적 해석의 주요 쟁점이었다. 1936년 헌법에서 스탈린은 소련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 사회주의제도 확립을 통해 적대계급이 소멸되어 계급투쟁 과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장기적 공산주의 이행을 위해 물질적 생산기반 발전의 현재적 과제를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¹ 흐루쇼프는 1959년 제21차 전당대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요로 하는 조건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1961년 제22차 전당대회에서 전 인민의 국가, 전 인민당 이론을 제기하며 공산주의 이행의 시간표를 제시했다.² 한편 1971년 제24차 전당대회에서 브레즈네프는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 개념을 공식화, 공산주의 이행에 이르는 장기성을 한층 강조했다.³ 1960년대 중국공산당은 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대립에서 소련의 ‘소과도론’에 대비되는 ‘대과도론’을 확립, 사회주의 전 시기를 과도기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지속에 따른 ‘계속혁명’을 주장했다. 같은 시기 북한은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분리하고 국제적 반제혁명투쟁의 종국적 승리에 이르기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지속을 주장하면서 강력한 통일단결을 강조하는 수령체제의 국가를 확립했다.

그러나 개혁개방기 중국은 스탈린식 해석에 가까운 소과도론으로 전환한 이후,

¹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해서 맑스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않고 혁명 후,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회 완성 이전의 이행기를 상정, 공산주의 사회의 초기단계(first phase)와 높은단계(higher phase)를 구분했다. 레닌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를 구분하고 맑스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회의 ‘초기단계’와 ‘높은단계’를 구분했다. 레닌은 전자를 사회주의, 후자를 공산주의에 연관시켜 혁명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에 이르는 단계적 역사발전의 청사진을 제공했다. 레닌은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혁명 후 사회주의 국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사회주의 건설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 공산주의에 이르는 과도기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Alfred B. Evans, Jr. “Developed Socialism in Soviet Ideology,” *Soviet Studies*, Vol. 29, No. 3, (July 1977), pp. 410~411.

² 흐루쇼프 지도부는 소련이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 수립을 통해 1961~1970년 1인당 국민생산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1980년에는 소련에 ‘공산주의’ 사회가 건설되어 그 이후 공산주의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Ibid.*, p. 411.

³ 브레즈네프는 사회주의를 두 단계로 구성된 장기간의 역사단계로 보고 ‘발전된 사회주의’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 보았다. 브레즈네프는 공산주의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5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 암시했다. 브레즈네프의 새로운 단계설정의 핵심은 공산주의 이행의 맑스-레닌주의 이상을 유지하면서 소련 경제현실에 따라 이행의 일정표를 뒤로 미루는 것이었다. *Ibid.*, p. 417, p. 412.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시장경제 등 이데올로기적 수정을 바탕으로 세계 자본주의에 편입했고, 시진핑 시대 ‘두 개 백년’의 기치 아래 세계적 질서의 기획을 꿈꾸는 차원으로 변화했다. 장기적 사회경제적 침체 속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2018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선언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를 채택하고 기존과는 다른 강도로 물질적 유인, 기업 및 지방정부의 자율성, 가치법칙·금융 등 ‘경제적 공간’을 강조하며 경제발전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⁴ 이러한 김정은 시대 경제사회적 변화는 대북제재와 팬데믹, 재난재해의 악조건 속에서 향후 북한이 소련,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이론상 변화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낳는다.

북한의 과도기론에 대한 기존연구는 중소갈등 국면에서 북한 과도기론의 특수성, 북한 과도기론의 주요 개념인 ‘사회주의 완전승리’ 논의의 형성 및 전개에 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⁵ 안경모는 탈이데올로기화와 재이데올로기화의 동학으로 체제형성기 이후 북한의 궤적을 분석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계승성과 북한의 ‘주체적’ 독창성의 균형을 확립한 ‘5.25 교시’의 1960년대 북한 과도기론의 원형이 김정은 시대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⁶ 또한 북한 체제형성기 사회주의 건설 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당내 갈등의 맥락에서 과도기 논쟁의 궤적을 정리한 연구들이 존재한다.⁷ 최근 북한 역사학 연구들은 체제형성기 사회주의 건설과 긴밀히 연결된 당내 및 역사학, 경제학계 논쟁을 폭넓게 고찰함으로써, 부르주아 민주주의, 전기/후기 인민민주주의 등 당시 이론적 개념들에서 북한의 과도기 논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였다.⁸ 특히 조수룡은 1955년 ‘4월 테제’에서 처음으로 김일성의

⁴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세계정치 34 (파주: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황주희·임재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9권 3호 (2021);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⁵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통일문제연구』, 통권47호 (2007); 정현숙,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8권 3호 (2014); 한승대, “북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개념사적 접근,” 『북한학연구』, 제8권 1호 (2020).

⁶ 안경모,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1966~2012): 적응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4호 (2015).

⁷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⁸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조선 ‘부르조야 민족’ 형성론: 반파시즘 민족이론의 관점에서,” 김성보·김예림 편, 『분단시대의 얇은 체제』 (서울: 해안, 2016);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과도기론이 제시된 맥락을 구소련 아카이브(러시아국립현대사문서보관소) 문서를 통해 보임으로써, 북한 과도기론의 특수성의 연원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당규약에 반영된 과도기론을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9차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올해 당규약 개정안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 변화, 북반부 사회주의 혁명과 남반부를 포함한 전국 혁명론의 규정 변화를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당규약의 과도기론 규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 조치 및 담론 변화를 살피고,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과도기론의 향후 변화를 전망, 해석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은 사회주의 건설기 이후 중국과 북한에서 과도기론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교적으로 고찰한다. III장은 최근 당규약 개정안 이르기까지 전체 당규약의 전국 혁명론 내용 변화를 추적하고 IV장은 2021년 당규약의 김정은 시대 과도기론의 변화를 검토한다. V장은 요약과 함의를 다룬다.

II.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도기론

과도기론쟁은 맑스, 엥겔스가 이론적 차원에서 논한, 혁명 이후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단계, 통치 형태와 기간을 둘러싼 논쟁으로, 중소 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한편 국내 정치, 권력 갈등의 전선을 형성했다. 이미 1920~1930년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반식민지 경제사회적 조건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하고 그 성패를 입증,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맥락과 자국 혁명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논쟁을 전개했다.⁹ 당시 일본, 중국 공산주의자, 인텔리들은 맑스의 인류역사 5가지 역사발전단계의 틀에서 자국의 사회적 성격을 밝히는 한편 향후 혁명의 주체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진행했다.¹⁰ 식민지 조선 역시 박문규, 인정식 등이 조선 사회성격에 대한 논쟁을 전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통권 92호 (2017);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서울: 역사비평사, 2018); 조수룡,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한국사연구』, 통권 190호 (2020).

⁹ Germaine A. Hoston, *The State, Identity,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China and Japa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¹⁰ 중국의 사회성질문제논쟁, 사회사문제논전, 농촌사회성질논전으로 이어지는 사회성격논쟁에

했다.¹¹

1920~30년대 ‘사회성격’ 논쟁의 전사를 바탕으로 한 1950년대 과도기 논쟁은, 해방과 혁명, 전쟁, 정부수립을 거친 중국, 북한이 맑스-레닌주의의 보편 이데올로기적 기반과 자국의 특수한 사회적 현실을 결합해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의 목적, 방법을 결정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졌다. 1960년대 중소갈등의 맥락에서 사회주의 체제수립 이후 과도기=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종결됐다고 한 소련의 ‘소과도론’에 맞서, 중국은 과도기=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공산주의 이행에 이르는 계속혁명 기간으로 확장한 마오쩌둥의 ‘대과도론’, 북한은 소련, 중국과 달리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분리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전세계 반제혁명 승리까지로 잡은 ‘중과도론’을 정리했다. 그러나 개혁개방기 중국은 다시 마오쩌둥의 대과도론을 비판, 소과도론으로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정식화했다. 반면 김정일 시대까지 기존 과도기론의 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시대 다양한 경제관리 개혁조치를 바탕으로 과도기론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의 과도기론 궤적

현실사회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이행 과정에 대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개념의 변화는 『고타강령 비판』(1875), 『국가와 혁명』(1917) 등 맑스와 레닌의 저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된다.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에는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혁명적 진화의 시기가 있다. 이 시기에 조용하여 역시 정치상의 과도기가 존재한다. 이 시기의 국가는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일 뿐이다.”라고 정의했던 데서, 부르주아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의 성격, 통치형태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그 기간에 대한 해석은 일국사회주의 건설의 혁명단계와 주체, 과업과 방법에 대한 정책결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이미 옌안 시기 마오쩌둥은 맑스-레닌주의와 중국의 구체적 현실과 혁명실천,

대해서는 백영서, “중국 민족운동의 과제와 사회성격논쟁,” 백영서·김대환 편, 『중국사회성격 논쟁』 (서울: 창비, 1988). 같은 시기 일본의 혁명전략과 그 객관적 조건으로서 일본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강좌파, 노농파 간 논쟁에 대해서는, Hoston, *The State, Identity,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China and Japan*.

¹¹ 홍종욱, “주변부의 근대: 남북한의 식민지반봉건론을 다시 생각한다,” 김성보·김예림 편, 『분단 시대의 앞의 체제』, pp. 385~388.

민족적 전통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1941년 이후 중국공산당은 아시아형 혁명 이론으로서 중국모델의 일반화를 시도, 1945년 제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마오쩌둥 사상’을 중국공산당 강령에 포함시켰다.¹² 마오쩌둥이 1930년대 중국공산당 노선투쟁에서 지도권을 확립한 것은 소련공산당과 코민테른으로부터 벗어나 중국 현실과 사회 성격에 맞는 혁명실천을 강조한 ‘맑스-레닌주의의 중국화’의 과정으로,¹³ 이러한 혁명과정에서 중국 특색 노선의 수립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 그리고 문화대혁명 이후 개혁개방기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지속·강화되어왔다.

스탈린과 코민테른이 중국공산당 성립 당시부터 중국에서의 ‘부르주아 혁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중국공산당은 1927년 제1차 국공내전 과정에서 농촌의 혁명근거지 건설이라는, 러시아혁명과 구분되는 중국의 독자적 실천, 경험을 축적하고 중국혁명이론을 형성했다.¹⁴ 혁명승리 이후 어떤 성격의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마오쩌둥은 1939년 12월, 1940년 1월 발표한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신민주주의론』에서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른 ‘신민주주의 사회’, ‘신민주주의공화국’의 과도기를 설정했다.¹⁵ 1949년 건국 이후 마오쩌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신민주주의’ 노선에 따른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을 채택, 신민주주의가 10년, 20년 혹은 좀 더 긴 기간 존속할 것으로 보았으나, 1953년 10월 입장을 급선회하여 ‘사회주의 과도기의 총노선’을 채택했다.¹⁶ 중국공산당은 1952년 말 제1차 5개년 계획(1953~1957년)을 수립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했고 1956년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사회주의 진입을 선언했다.¹⁷

¹²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서울: 창비, 2004), pp. 45~47.

¹³ 코민테른의 노선과 중국적 현실을 앞세우는 노선은 대장정 이후 제2차 국공합작에 이르기까지 대립해왔고 그 핵심 쟁점의 하나는 “중국 사회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혁명의 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였다. 하남석, “이론적 논쟁과 노선 투쟁,”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서울: 책과함께, 2021), p. 71.

¹⁴ 안치영, “중국공산당 100년: 혁명에서 신시대까지,”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pp. 40~41.

¹⁵ 장영석, “사회동원과 조직화,”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p. 139.

¹⁶ 이러한 급격한 전환의 배경으로는 한국전쟁 참전을 포함한 냉전의 격화가 존재한다. 하남석, “이론적 논쟁과 노선 투쟁,” p. 77. 특히 장영석은 토지개혁법이 발표된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영향을 지적하며, 전쟁 기간 항미원조, 위국보가, 항미원조, 보위평화 운동과 함께 중국 도시의 사회계층에 대한 급진적 대중운동(지식인에 대한 사상개조운동, 관료 부패·비효율성에 대한 ‘삼반’ 운동, 부르주아지에 대항한 ‘오반’ 운동)의 열기를 지적한다. 장영석, 위의 글, pp. 141~144.

중국공산당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의 스탈린 비판, 국내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집단화 및 관료주의에 대한 저항 등을 배경으로 발전모델, 권력 구조에 대한 일부 조정을 시도하기도 했다.¹⁸ 그러나 소위 ‘쌍백 운동’(백화제방, 백가쟁명)은 1957년 6월 ‘반우파투쟁’을 통해 억압되었고, 마오쩌둥은 급진적 이상주의, 주의주의(voluntarism)에 의거해 대약진운동을 일으켰다.¹⁹ 대약진 운동의 실패,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1961년 ‘8자 방침’(조정, 공고, 충실, 향상) 하 생산력 증진, 일부 사유재산 및 물질적 유인 인정, 호별영농제를 실시하는 ‘조정’이 이뤄졌으나,²⁰ 중소갈등 국면에서 수정주의 비판, 관료주의 타파 및 공산주의 실현에 대한 혁명적 열정은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졌다.

소련공산당이 1961년 10월 22차 전당대회에서 전인민국가론과 전인민당 이론을 제기, 향후 20년 안에 공산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강령을 채택하자 중국은 반수정주의 투쟁을 강화했고, 1963~64년 중소는 사회주의 사회에 계급 투쟁이 존재하는가를 두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지속했다.²¹ 1962년 이후 마오쩌둥은 소련의 소과도론과 차별화된 대과도론을 채택했다.²² 마오쩌둥의 대과도론은 사회주의 사회를 그 전(全) 시기가 과도기인 장기간에 걸친 역사적 단계로 보고 계급투쟁을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모순으로 인식했다. 또한 과도기를 세 개 단계로 구분해 제1과도기는 사회주의경제·소상품경제·자본주의경제가 병존하는 경제, 제2과도기는 전민소유제와 집체소유제가 중심이 되는 경제, 제3과도기는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단일 전민소유제를 갖는 경제형태로 보았다.²³ 마오쩌둥은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장기간의 과도기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 지속을 주장했다.²⁴ 이는 1969년 중국공산당 제8기 중앙위원회 12차 전체회의(8기 12중전회) ‘중국공산당장정(초안)에 관한 결정’에

¹⁷ 안치영, “중국공산당 100년: 혁명에서 신시대까지,” pp. 42~43; 장영석, 위의 글, p. 145.

¹⁸ 안치영, 위의 글, pp. 43~44.

¹⁹ 하남석, “이론적 논쟁과 노선 투쟁,” p. 78.

²⁰ 위의 글, p. 79.

²¹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p. 52.

²² 1953년 ‘과도기 총노선’을 제기하면서 마오쩌둥은 195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기본방침을 수용, 1956년 생산수단 소유제에 대한 사회화가 완성된 이후 중국사회의 주요모순을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계급 간의 모순, 사회주의 길과 자본주의 길의 모순으로 규정했다. 위의 책, p. 59. 마오쩌둥은 1959년 말 1960년 초 소련의 ‘정치경제학교과서’ 분석을 통해 말스의 ‘고타 강령비판’의 명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1962년 8기 10중전회에서 새로운 과도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위의 책, p. 60.

²³ 위의 책, p. 61.

²⁴ 위의 책, p. 62.

반영되고 1973년 당규약, 1975년 1월 신헌법, 1977년 11전대회 당규약 등에 관철되었다.²⁵

그러나 1978년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개혁개방의 전기가 마련되고 중국공산당은 문혁의 상흔을 해결하는 한편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대적 과업에 당면, 종전의 과도기론의 이데올로기적 구속을 해방하는 비판적 논쟁과 수정 과정을 거쳤다. 1979~80년 장쑤성 우시의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법칙 문제에 관한 토론회'는 마오쩌둥의 대과도론을 비판했고, 중과도론, 소과도론, 새로운 대과도론 등 다양한 해석 경쟁이 소과도론으로 수렴한 결과, '미발달 사회주의' 상태의 중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했다.²⁶ 덩샤오핑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정당화한 과도기론의 수정을 시작으로, 중국공산당은 1982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단계 언급,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공식화를 거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경제개혁 정책 추진의 현실적 필요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전적 맑스-레닌주의를 재해석, 중국화해왔다.

2. 북한의 과도기론 궤적

개혁개방 이후 마오쩌둥의 대과도론을 수정하고 중국 개혁개방 현실의 요구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수정, 정당화를 지속한 중국과 달리, 김정일 시대까지 북한은 경제개혁적 조치 도입 이외에 노선·방침상 개혁개방을 단행하는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 단계에 대한 과도기론 역시 1960년대 논쟁이 정리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²⁷ 당의 유일사상체계, 수령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특성상 선대의 노선, 정책에 대한 비판과 수정을 통한 새로운 노선, 방침의 이데올로기적 혁신, 정당화 과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

²⁵ 위의 책, p. 63.

²⁶ 소과도론의 주류화, '미발달 사회주의론' 정식화 결과, 중국 사회는 '발전하지 않은 사회주의'의 현실을 인정하고, 본래의 맑스적 과도기(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의 고급단계로의 과도기)와 특수한 레닌적 과도기(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가운데 특수한 과도기 입장에서 사회주의를 논의, 과도기에 있어 여러 단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의 책, pp. 64~75.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식화 과정에서 역시 개혁개방론자들은 '사회주의' 개념의 모호성에 기반해, 한편으로 맑스이론체계의 비과학성을 논박하고 다른 한편 중국사회에 고유한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사회주의를 2단계, 3단계, 4단계, 잠정적 2단계 등 다양한 단계로 나누는 이론들을 제기했다. 위의 책, pp. 121~124.

²⁷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p. 300.

문이다.²⁸ 더욱이 북한 현실에 맞게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화’하는 과정은 그 특유의 ‘절충주의’적 성격으로,²⁹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정합성을 고수하는 틀 안에서 변화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혁명기와 건설기 중국과 마찬가지로, 체제형성기 북한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발전단계, 해방과 분단 이후 북조선의 혁명단계에 대한 시대구분 및 주체 논쟁, 민족 형성 및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 논쟁, 인민민주주의 논쟁, 과도기 성격 논쟁 등 혁명 이후 건설의 단계와 속도 문제와 연결된 다양한 논쟁이 존재했다.³⁰ 1950년대 중반 사회주의 이행의 시기와 속도에 대한 과도기 논쟁에서 당내 주류의 입장은, 반제투쟁의 완성으로서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북반부만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반대하며 반제반봉건단계 유지론의 입장에서 농업협동화의 유예를 주장한 송례정 등의 이행 유예론, 생산관계의 개조가 생산력 발전 수준에 조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기초 마련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의 활용을 주장한 일부 소련계 인사의 이행속도 조절론과 대립했다.³¹ 전자(이행 유예론)는 북반부 단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계급연합적 독재로서 ‘인민민주주의독재’로 보는 점에서 연안계의 ‘통일전선 국가론’과 상통한 반면, 후자(이행속도 조절론)는 소련의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NEP)에서와 같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활용해 사회주의 개조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점진적, 장기적 관점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당내 주류 입장은 ‘민중기지 강화’의 목표 하에 자본주의적 요소의 청산을 주장하는 한편 중공업 중시 노선, 자립경제를 강조했다(급진적 이행론).

당 지도부는 1954년 11월 전원회의에서 농업협동화 및 사회주의 개조 드라이브를 추진, 새로운 당 강령 마련을 통해 자본주의적 요소의 제한과 청산, 그리고 과도기 총노선에 대한 주류 입장을 확립하고자 했다.³²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으로의

²⁸ 안경모,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1966~2012).” p. 170.

²⁹ 장달중·임수호, “김정일체제와 강성대국론,”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³⁰ 서동만, “1950년대 북한의 정치 갈등과 이데올로기 상황”; 김성보, “195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논의와 귀결: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1950년대 북한의 조선 ‘부르주아 민족’ 형성론: 반파시즘 민족이론의 관점에서”;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김재용, 『북한체제의 기원』; 조수룡,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³¹ 조수룡, 위의 글, pp. 310~315.

³² 구소련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1955년 1월 작성된 “현 단계 우리 혁명의 성격과 북조선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우리 당의 주요 과업”과 1955년 2~4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조선로동당 강령

과도기 총노선이 공식화된 것은 1955년 4월 1~4일 당 중앙위원회 제10차 전원 회의로, 김일성은 회의 보고에서 현 단계 (북반부) 혁명의 성격에 대해, “반제반 봉건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이 완전히 수행되었으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당의 과제에 대해 “미제와 리승만 도당의 압박 하에 있는 남조선”에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 반부에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민주 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그런데 1955년 ‘4월 테제’에서 선언된 사회주의 이행으로의 과도기 규정은 1956년 3차 당대회 사업총결보고에서 김일성이 1947년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민주 개혁의 제 성과들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중략)… 점차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과업들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발언하면서, 1947년 2월 시점으로 과도기를 소급시키는 급진적 전환을 보인다. 이러한 전환은 1956년 3차 당대회 김일성 발언 이후 벌어진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 학계의 사회주의 과도기 논쟁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었다.³⁴ 1950년대 후반 북한의 과도기 논쟁은 정부 수립 시점을 사회주의 이행으로의 과도기 시작으로 규정함으로써 급진적 이행론으로 수렴되었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일단락된 1958년 과도기의 종결 이후에는 1959년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집단주의적 열기를 바탕으로 ‘공산주의’ 이행을 다그치는 이상주의적 전망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후반 과도기 논쟁은 경제발전 노선 갈등과 관련된 갑산파와 당내 주류 갈등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맞는다. 갑산파 숙청 직후 1967년 김일성의 소위 ‘5.25 교시’라 불리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

(초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수룡은, 이들 문서가 195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신강령 채택을 위한 준비과정과 연관된 작업으로서, 자본주의적 요소의 제한과 청산, 그리고 사회주의 개조를 주장한 당 주류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위의 글, pp. 323~326.

³³ 위의 글, pp. 326~327.

³⁴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 과학원 토론회들을 통한 사회주의 과도기 논쟁에 대해서는 위의 글, pp. 330~333. 조수룡은 구소련 아카이브의 1955년 당시 ‘4월 테제’의 러시아어 번역본과 1960년판 『김일성 선집』에서 최초로 공개된 테제를 비교분석해, 1960년 선집본이 1955년 번역본과 달리 혁명단계와 관련된 주요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전체 우리 혁명은 여전히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되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첫 단계에 있는 것이다”, “비록 반제반봉건혁명의 과제와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이 완수되지 않았지만, 북조선에서 사회주의혁명의 과제-인민민주주의혁명의 두 번째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구절이 삭제되었는데,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시점이 인민정권 수립 시점으로 소급된 이후 1955년 ‘4월 테제’의 혁명단계 관련 규정(인민민주주의혁명의 두 번째 단계로서 사회주의혁명)은 1960년 『김일성 선집』에 포함될 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위의 글, pp. 328~329, 334.

타리아 독재 문제에 대하여”는 북한 과도기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립과 당 조직적 재편을 동반했다.³⁵ 대외적 맥락으로는 ‘발전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시장, 가격, 인센티브 등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개혁 조치들을 취한 동구권의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를 수정주의로 비판하며 군중로선의 정치, 주의주의적 동원에 입각한 돌파를 강행한 중국의 대립이 존재했다. 중소갈등의 문맥에서 북한은 1964~65년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방침에 따른 중앙집권적 계획체제의 유례없는 강화, 사상혁명에 기반한 인간 개조를 통해 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³⁶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은 가치법칙에 의한 균형 도입 배경, 정치적 자각에 의한 동원의 적극화 등 중국의 경로에 가까운 선택이었지만 계급투쟁의 돌파 뿐 아니라 ‘계급로선+군중로선’의 절충과 타협의 측면에서 중국과는 차이를 보였다.³⁷

경제발전 노선을 둘러싼 대내외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갈등 속에서 1960년대 김일성이 확립한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주체적’ 해석은 다음의 특징을 가졌다. 1)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의 분리, 2) 과도기를 사회주의 제도 확립을 넘어 “노동계급과 농민간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중산층, 특히 농민대중이 우리를 적극지지”하는 “무계급 사회” 즉 “사회주의 완전승리”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 3)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는 무계급 사회에 더해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단계로 정의, 4) 생산력 수준을 공산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까지 발전시키고,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위협 및 내부 적들의 저항에 대비하기 위해 공산주의 높은 단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속하는 것이다.³⁸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분리하고 전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승리에 이르기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정당화한 북한의 과도기론은 기존의 현물동학적 통제에서 경제적 분권화, 가격동학 도입을 위한 실험이 진행된 1980년대 중후반에

³⁵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 문제에 대하여 당사상 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83). 기존에 집단지도체제 형태로 존재하던 당 조직 지도체계는 1966년 2차 당대표자회 직전 총비서, 비서국 신설을 통해, 경제 분야 테크노크라트가 후퇴하고 만주 빨치산 출신 군 인사들의 대거 부상하는 변화를 보였다.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2), p. 99.

³⁶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서울: 선인, 2009), pp. 423~441.

³⁷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pp. 99~101.

³⁸ 안경모,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1966~2012),” p. 166; 서유석,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p.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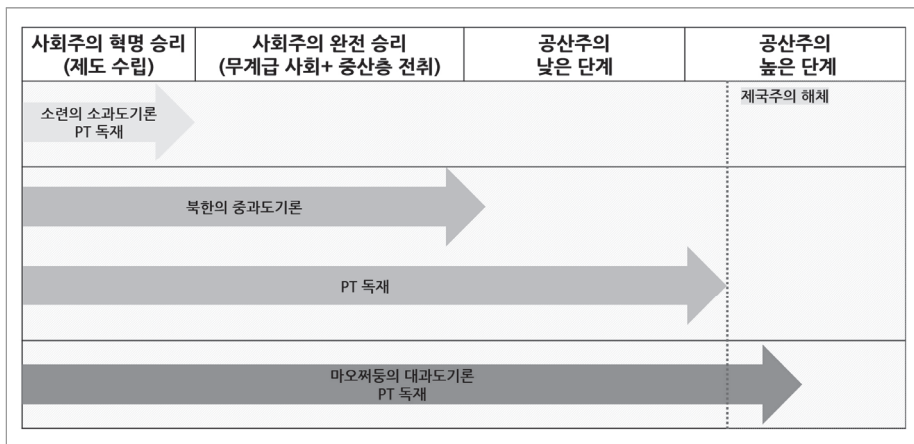
들어서서 재확립되었다. 1986년 김일성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를 조문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기간을 사회주의 제도 확립 이후, 사회주의 완전승리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로 규정했다.³⁹ 이 기간은 1992년 개정헌법 9조 “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한다는 규정에서, ‘인민정권+3대혁명’의 통치형태를 갖는다. 1960년대 후반 현물동학적 균형화에 경도되어 가격동학 측면을 배격했던 ‘대안체계’는 1991년 현물동학과 가격동학 균형의 체계로 재정식화되면서, 당시 재정되던 ‘과도기 체제’로서의 현 단계에 맞는 일반적 경제관리형태는 물론 사회주의 사회 전반을 관리운영하는 정치방식으로까지 이론화되었다.⁴⁰ 즉 1980년대 후반 과도기론의 재정립은 동구 사회주의권의 전환과 중국의 개혁개방 변화의 맥락에서 독립채산제, 가격동학의 복권을 통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결합, 흥과 전의 결합으로서 대안체계를 사회주의 경제관리 체계이자 정치방식으로 확립한 북한 나름의 적응을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의 과도기론은 스탈린의 소과도론, 마오쩌둥의 대과도론과 비교해, 사회주의 제도 수립 이후 사회주의 완전승리에 이르는 기간을 과도기로 설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기간을 과도기와 분리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반제국주의 투쟁의 최종 승리까지 공산주의 단계에도 지속한다고 본 ‘증과도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증과도론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 완전승리로 나아가는 과도기를 재확립, 사회주의를 세분화된 단계가 존재하는 장기간의 역사 단계로 봄으로써 가격동학의 활용을 통해 생산력 발전 요구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소련과 개혁개방기 중국의 소과도론 채택이 사회주의 단계의 장기성 및 내부 단계의 세분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던 역사를 고려하면, 북한의 과도기론 역시 향후 공산주의 이행에 이르는 과도기, 사회주의 단계를 어떻게 세분화, 유연화해 접근하는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³⁹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1986.12.30.),” 『김일성 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p. 181에서 재인용.

⁴⁰ 이정철, 위의 글, p. 181.

〈그림 1〉 소련, 중국, 북한의 과도기론



출처: 저자 작성.

Ⅲ. 조선노동당규약 전국 혁명론 변화: 과도기론 규정 변화

조선노동당규약은 북한의 과도기론, 즉 한반도 북반부와 함께 남반부를 아우르는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단계 및 노선, 혁명주체와 방법에 대한 이론적 규정을 반영한다. 1946년 북로당 창당대회 당규약에서부터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에 이르는 과도기론 관련 규정은 조선노동당의 당대 국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과 투쟁 방침을 압축적으로 제시해왔다. 당규약에서 과도기론을 가늠할 수 있는 조항은 ‘전국 혁명’에 대한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그리고 공화국 ‘북반부’ 혁명에 대한 규정 및 투쟁 방향과 세부 방법, 남반부 해방과 ‘전국적 범위’의 조국통일 방법론을 기술한 부분이다. 당규약의 과도기론 관련 규정, 즉 1) ① 당면목적과 ② 최종목적, 2) 북반부 혁명 과제, 3) 조국통일 과업의 구성에서, 당의 당면목적은 당의 ‘최소강령’, 즉 현 단계의 달성 과업을 밝히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최대강령’, 즉 궁극적으로 당이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을 의미한다. 1) ① 당면목적 중 북반부를 가리키는 기술과 2) 북반부 혁명 과제 부분의 서술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과 관련된 조항으로 해당 국면 북한의 국내정치적 목적과 우선순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국통일 원칙은 전국적 차원의 견지에서 북반부 혁명과

조응해 남반부에서의 과제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1) ② 최종목적은 당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으로 남북반부 구분 없이 전국적 관점에서 서술된다.

우선 1946년~2016년 당규약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1946~1948년 당규약은 당의 목적을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건설과 근로대중의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의 향상’이라 규정했다. 1956년 당규약은 처음으로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 목적을 밝혔으나, 전국 혁명의 시각에서 남북반부를 통틀어 당면목적(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 최종목적(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밝혔다.⁴¹ 이어 남북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단결시키고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 역량들과의 통일 전선’ 강화의 방법으로, 남반부의 해방과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의 조국통일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국통일의 전국적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반부에서는 ‘인민민주주의제도 공고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하며 “생산의 부단한 장성과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1961년 당규약은 당면목적 부분에서 남북반부의 분리 서술(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보장, 전국적 범위: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혁명’ 수행)이 이뤄졌고,⁴² 애국적 민주역량들과의 통일전선을 통한 남반부 해방과 조국통일 달성을 강조했다. 당면목적의 북반부 혁명 서술에서는 ‘사회주의 완전승리’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⁴³ 1961년 4차 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 수상은 3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적 개조 완료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통한 인민적 개진기의 전망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주의적 개조 평가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용어를 사용했다.⁴⁴ 1970년 당규약은 1956년의 [전국 혁명의 당면

⁴¹ “조선 로동당은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개혁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1956년 조선노동당규약)

⁴²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1961년 조선노동당규약)

⁴³ 1961년까지 당규약의 과도기론 규정은 당면목적+최종목적 이후, 북반부, 남반부 혁명 각각에 대한 세부 기술에서 통일전선 강화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룬다. 1970년 당규약부터는 당면목적+최종목적 규정 이외에 남북반부 혁명에 대한 상세 기술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⁴⁴ 김일성은 농업, 수공업 및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따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 확립을 평가하면서 생산력 발전수준이 낮고 기술이 낙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후 짧은 기간에 당이 사회주의적 개조를 추진한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현대적 농기계에 관하여 말한다면 물론 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농업까지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하지 않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으나 생산력과 기술 발전 수준이

목적+최종목적]-[남반부 혁명]-[북반부 혁명]의 세 가지 서술의 편제를 이어받아 [전국 혁명의 당면목적(북반부/남반부)+최종목적]-[북반부 혁명 상세]-[남조선 혁명 상세]로 구성, 북반부 과제가 먼저 서술되는 형식을 확립했다. 1970년 규정된 당면목적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보장,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수행이다. 이는 전국적 범위 목표에 대한 1956~61년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개혁,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 규정과 차별화된 규정으로, 북한은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를 지나 사회주의에 진입,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경로로, 남한은 반제반봉건 단계를 지나 (사회주의 이전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는 경로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1970년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기술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무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 강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제고를 ‘자기(당)사업의 최고원칙’으로 밝히고 당사업에서 사람들과의 사업, 계급로선과 균중로선,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관철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전 사회의 로동계급 규범에 따른 혁명화·개조, 지배적 원수들에 대한 독재,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한 경제 및 국방건설, 사회주의 제도 공고화를 지적했다. 한편 남반부를 포함한 조국통일 서술에서는,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로선 관철,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퇴거, 일본 군국주의 반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 지지성원을 통한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제시했다.⁴⁵

1980년 당규약의 당면목적은 1970년과 동일하나, 최종목적에 공산주의사회 건설과 함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포함했다. 북반부 혁명 서술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 추진, 로동동맹을 기초로 한 통일전선 강화를 강조하고, 당사업의 기본으로 사람

비교적 낮더라도 넓은 생산관계 개조에 대한 요구와 이를 담당할 혁명역량이 준비된 상황에서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정당했다는 것이다. 김일성, “제4차 조선로동당대회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p. 18.

⁴⁵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로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1970년 조선노동당규약)

과의 사업,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촉진하는 투쟁에서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와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공고화, 사회주의 제도 강화와 함께 ‘3대혁명’ 수행을 강조했다. 한편 남반부 서술에서는 애국적 민주력량들과의 통일전선 강화, 미제국주의 침략군대 남조선 퇴거 및 식민지통치 청산, 일본 군국주의 재침기도 반대, 사회민주화, 생존권투쟁 지원을 통해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정은 후계구도가 시작된 2010년 당규약부터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은 크게 변화했다. 우선 2010년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을,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규정했다. 2012~2016년에는 강성대국이 ‘강성국가’로 수정되었을 뿐, 당면목적-최종목적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즉 김정은 시대 당면목적-최종목적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종목적에서 ‘공산주의사회 건설’의 지향이 사라진 것이다.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도 1970~1980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완수’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으로 수정되어 탈냉전기 북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행 경로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미묘한 변화를 추정케 한다.

북반부 혁명 서술에서는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당안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 보장,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당건설에서 계승성 보장을 언급함으로써 후계구도를 반영했다. 2010년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 강화를 강조하고, 주체사상교양 강화 및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 반대배격,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 견지를 지적한 부분은 2012년부터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 강화’로 수정되어 김정은 체제 확립의 변화를 반영했다. 또한 2010년 이후 북반부 서술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 관철을 계속 강조하면서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을 규정했다는 점,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재삼입(1970년)했다는 점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강조는 2016년 당규약에서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한다는 새로운 슬로건이 등장하는 데 이른다.

동시에 2010년 당규약은 김정일 선대 업적인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지적하고 당이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한다고 규정했다.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은 ‘인민정권 강화’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으로 규정하고 그 활동으로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무장,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 공고발전, 인민군대 강화와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확보,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와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제시했다. 2016년 당규약은 이러한 세부 내용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운 ‘사회주의 경제 강국, 문명국건설’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통일 투쟁에 대해서는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력량과의 통일전선, 미제의 침략무력 퇴거,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 종식, 일본군국주의 재침책동 분쇄,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지지성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밝혔다. 상기한 2010년의 조국통일 규정은 201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IV. 2021년 조선노동당규약 전국 혁명론 변화와 김정은 시대 새로운 전략적 노선

2021년 당규약에서 과도기론과 관련된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 총노선과 조국통일 규정은 2010년 김정은 후계구도 이후 2016년까지 규정과는 차별화된, 특기할 만한 변화를 보인다. 우선 서문의 투쟁목적 중 당면목적, 최종목적 규정이다. 2021년 당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이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밝혀, 2010~2016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2010년 강성대국)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한다는 규정과 크게 달라진 목적을 제시했다.

북반부의 강성국가 목표 대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제기한 것은 무엇보다 개혁개방 이후 ‘부강’, ‘문명’의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제시해온 중국공산당장정과 ‘통약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공산당장정은

‘부강 선진의 사회주의 국가’의 표현이 사용된 1956년 8차 전국대표대회 당장이 부정된 이후 등장하지 않은 부강 등의 용어를 개혁개방 이후 전면 복권시켰다.⁴⁶ 이와 함께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최종목적 기술 역시 사회주의·공산주의 일반론적 용어를 차용함으로써 중국공산당 당장과의 통약성 강화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⁴⁷ 더불어 2021년 당규약이 당면목적 중 기존에 남반부 혁명론을 의미했던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표현을 삭제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을 제시한 것은, 북반부의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함께 김정은 시대 전국 혁명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도기론에 일정한 이론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든다.

기존 당면목적의 남반부 혁명에 대한 서술 변화, 즉 전국적 범위의 ‘반제반봉건 민주개혁’(1956년),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1961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1970~1980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2010~2016년)을 거쳐 2021년 ‘사회적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의 전환은 북한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규정을 유연화하고 과거에 비해 혁명 혹은 건설의 단계를 낮춰 설정해온 과정으로 판단된다. 먼저 1970~1980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에서 2010년 이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DR) 단계로 남반부 혁명단계를 수정한 것은 특히 동구권 붕괴 이후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한 ‘전환적’ 해석에 비추어 보면,⁴⁸ 당규약에 반영된 북한의 전국 혁명에 대한 이론적 전제가

⁴⁶ 1982년 중국공산당 12차 전국대표대회 당장은 ‘고도의 문명적, 고도의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고도의 물질문명 건설’, ‘고도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 부강’, 1992년 14차 전국대표대회 당장은 ‘부강 민주 문명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07년 17차 전국 대표대회 당장은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2017년 19차 전국대표대회 당장은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표현을 사용했다.

⁴⁷ 2021년 당규약은 ‘당의 최고강령’ 항목을 신설하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최고 강령으로 기술하고, 최종목적으로 2010년 이후 사라진 ‘공산주의 사회 건설’ 표현을 부활시켰다.

⁴⁸ 정영철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이 과거 비판의 대상이었던 민족주의를 새롭게 재해석함으로써, 사회주의와 함께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이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주목한다. 김일성은 1991년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담화에서 ‘민족주의는 진보적 사상’으로 평가하며 자신을 ‘민족주의자’로 규정했고, 김정일은 1997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계급 위업인 동시에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위업으로 규정.’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 (2017). 북한 민족주의론의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강혜서,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7.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진화해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이행만이 아니라 애국애족에 바탕한 민족주의적 연합, 통일이 진보적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인민민주주의 → 사회주의 이행의 경로가 아닌 보다 유연화된 접근을 남반부에 적용하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북측과 남측의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에 기초해 보다 동등한 통일 방식을 사고하는 과정으로 점진적 변화를 거쳐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2016년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 단계에서 2021년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의 변화는 유사한 단계 혹은 한 걸음 더 유연화된 규정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당면목적의 북반부 서술인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은 특히 중국공산당 당장 표현과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혁명 단계설정의 유연화, 세분화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만든다. 개혁개방기 중국의 ‘소과도론’의 핵심이 과도기를 세분화된 단계로 나눠 접근하면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사회주의 상품경제’, ‘사회주의시장경제’ 등 개혁개방 정책 진전에 따른 실사구시적 정당화를 강화한 데 있다고 할 때, 2021년 당규약 당면목적의 변화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혁명·건설에 대한 연성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과도기론 규정과 관련해 북반부 혁명단계의 세분화 내지 유연화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전개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의 개혁적 조치, 2018년 4월 채택된 경제발전총력집중 노선의 실행과 관련해, 현재 북한 사회가 경제적 분권화, 효율성, 시장·가치법칙·금융 등 비사회주의적 요소, 소유권 문제 등에서 얼마나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⁹

중국은 개혁개방기 점진적 변화 궤적의 시작점에 마오쩌둥의 대과도론을 비판, 기존 과도기론을 새롭게 해석한 것을 계기로, 경제개혁 정책이 매 시기 진전할 때 그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과정을 거쳐왔다.⁵⁰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⁴⁹ 다만 여기서는 지면상 1946년 1차 당규약부터 2021년 최근 개정안에 이르는 과도기론 관련 규정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전체적 변화의 경향을 논하는 데 그친다. 실제 과도기론의 구체적 변화를 추정하고 밝히는 작업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개혁개방적 조치들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함께 『경제연구』 등에 나타난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다.

⁵⁰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당의 실사구시 노선에 따른 범시파 비판, 1981년 11기 6중전회 ‘역사 결의’에서 중국 사회 주요모순에 대한 규정 변화(‘계급투쟁’이 아닌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시에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 1987년 13전대회에서 ‘하나의 중심(경제건설), 두 개의 기본점(개혁개방과 4항 기본원칙)’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당내 개혁파가 위축된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념논쟁 종결(‘부쟁론’)을 통해 1990년대 시장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의 지속을 정당화

제기된 ‘삼개대표론’은 ‘혁명당에서 집정당으로의 전환’, 자본가 포섭을 통한 집정기초의 확대를 넘어, 사회 전체 내 공산당 위상의 재점위를 통해 최근 시진핑 체제에 들어서는 ‘당 영도의 제도화’를 가능하게 한 이론적 변화였다.⁵¹ 1997년부터 본격화된 국유기업 소유제 개혁, ‘개제’(改制)를 통해 국유기업 노동계급은 ‘국가의 주인’이라는 과거 명목상의 위치조차 상실했고, 기업 공장장, 당 서기 개인이 국유공장 재산을 사유화하는 국유기업 조정과정의 ‘중국식 사유화’ 결과 형성된 ‘홍색 자본가’들은 2002년 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삼개대표론’ 공식화 이후 사회주의 계층으로서의 인정과 당원 자격을 부여받았다.⁵² 경제개혁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중국의 이데올로기적 변용을 참고할 때, 김정은 정권에서 진행된 주요 개혁개방적 조치들-중앙급 특구 외에 지방에서 자체 판단에 따른 지방급 개발구를 포함하는 경제개발구의 설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따른 포전담당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도입 결과 ‘계획’의 축소와 기업 자율성의 최대한 발양, 환율 현실화, ‘상업은행’ 설치 등 금융·재정에 대한 새로운 관심, 코로나 이전까지 대외무역의 강조, ‘돈주’의 합법화 및 ‘주민유휴화폐자금’ 동원의 허용 등 시장적 요소, ‘경제적 공간’에 대한 정당화 등-역시 북한의 기존의 과도기론에 어떤 점진적 변용을 낳을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계속 주목되는 문제이다.⁵³

또한 2021년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 총로선과 조국통일에 대한 상세규정은

했다. 이후 중국공산당은 1993년 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으로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한 (1980년대 ‘부분적’에서) ‘전면적’ 도입으로 전환하고, 공유제를 주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에 대한 법률을 채택했다. 서봉교,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pp. 105~106, 124.

51 중국공산당은 과거 ‘중국 노동계급의 선진적인 조직적 부대’(1945년 7차 당장),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1956년 8대), ‘노동계급의 선봉대’(1982년 12차)에서 ‘노동계급의 선봉대이자 동시에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2002년 16차)’로 재규정함으로써,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초월적 지위에 기반해 분화된 이익에 대한 최종적 심판자, 조정자로 당의 성격과 역할을 변화시켰다. 장윤미, “노동자 조직의 역사와 변화,”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p. 198.

52 ‘삼개대표론’은 공산당이 ①선진생산력, ②선진문화, ③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선진생산력’을 담당하는 사영기업가를 당내 대열로 받아들였다. 조영남, “중국의 정치개혁: 성과와 한계,” 이현정 편,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서울: 한울아카데미, 2019), p. 108; 서봉교,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p. 126.

53 장윤미, “노동자 조직의 역사와 변화,” p. 214. 정영철, “전략적 선택과 북한 사회주의 미래 - ‘새로운 길’과 인민생활 향상”; 김기현,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 이후 ‘재생산과정’과 ‘화폐회전’ 분석”; 이경수, “북한 지방정부 재정유인의 명과 암 - 2012년 지방예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세계정치 34 (파주: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 관리방법’을 중심으로』(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 법칙의 재해석”; 황주희·임재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과도기론 규정 관련 연성화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북반부 혁명 상세 부분에서 2021년 당규약은 특히 기존의 균중로선에 대한 기술에서 인민대중의 위상을 새롭게 부각시켰다. 2010~2016년 당규약이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규정했던 것을 2021년 당규약은 “조선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2016년 당규약에 첫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2021년에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기본 정치방식”이라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2012~2016년)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제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 실현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1980년 당규약 이후 사라진 ‘사회주의 완전승리’ 목표를 복원하는 한편 ‘선군의 기치’를 대체하는 대신 ‘자력갱생의 기치’에 따른 경제건설과 공화국 무력, 자립적 국방공업을 통한 방위력 확보를 강조했다.⁵⁴

마지막으로 2021년 조국통일 관련 상세 기술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항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을 반영하는, ‘민족공동 번영’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혁명·건설 단계의 유연화와 함께 통일의 전망에서 역시 단계적 접근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조국통일 기술은 우선 남조선해방론의 주요 규정이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표현의 삭제와 같은 유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한편,⁵⁵ 통일전선 역량과 관련해 “해외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룡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새로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변화의 정점은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⁵⁴ 2016년 “선군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을 령도”,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을 다그쳐나간다”고 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관련 세부 규정은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사회주의 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제도적우월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양시키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 “공화국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자립적 국방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나간다”로 수정되었다.

⁵⁵ 유화적 표현은 그 외에도 2010~2016년 ‘사회주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구절의 삭제, 당면목적 서술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삭제 및 본문의 당원 의무에서 ‘조국통일’ 표현 삭제, 그리고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로 수정, ‘일본 군국주의’ 표현의 삭제 및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외세의 간섭’으로의 수정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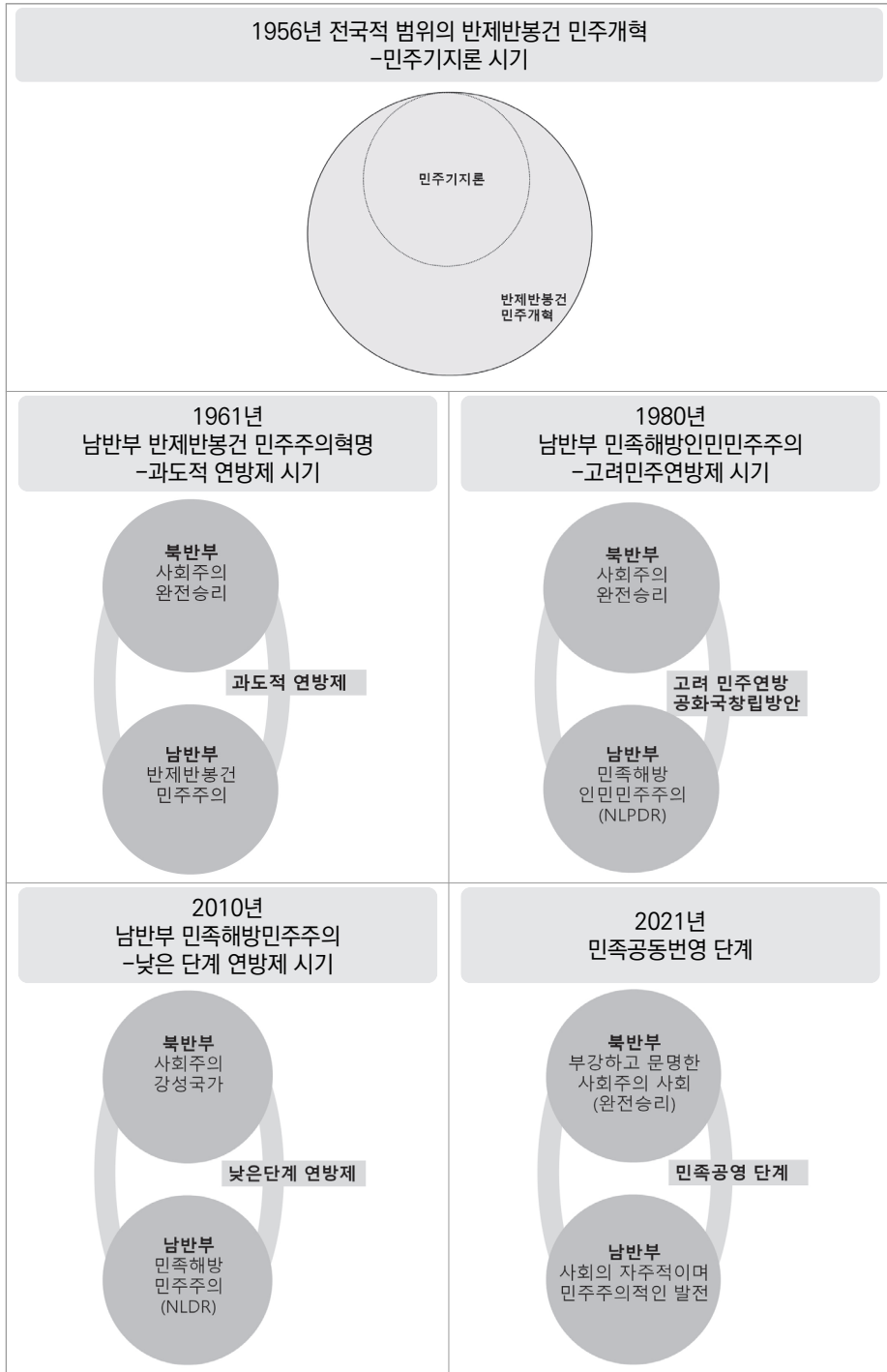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당 규약에 포함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3대 원칙을 분리시키는 한편, ‘조국의 평화통일’ 단계 이전에 ‘민족의 공동번영’ 단계를 새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기치 하의 ‘평화통일’ 투쟁 단계(높은 단계 연방제)와 ‘민족공동 번영’ 투쟁 단계(낮은 단계 연방제 혹은 국가연합 단계)를 이분화하는 접근으로 해석가능하다. 즉 과거의 ‘민주기지론’이 남북 단일혁명을 전제로 한 개념, ‘연방제’는 남북 혁명단계가 분리된 시기에 전국 혁명을 매개하는 개념이라면,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은 연방제를 통한 전국 혁명을 다시 2단계로 나누는 더욱 점진적 접근법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 북한 전국 혁명론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구성

구분	1차 합당 대회 제정 (‘46. 08. 30.)	2차 당 대회 개정 (‘48. 03. 30.)	3차 당 대회 개정 (‘56. 04. 29.)	4차 당 대회 개정 (‘61. 09.18.)	5차 당 대회 개정 (‘70. 11.02.)	6차 당대회 개정 (‘80. 10.13.)	3차 당대표 자회 (‘10. 09.28.)	4차 당대표 자회 (‘12. 04.11.)	7차 당대회 개정 (‘16. 05.09.)	8차 당대회 개정 (21.01.09.)
당면 목적 (최소 강령)	통일	민주기지론		연방제 시기 (과도적 연방제 → 고민연 → 낮은 단계 연방제)					민족공영 단계	
	북 반부	조선 민주 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	반제 반봉건 민주 개혁	사회주의 완전승리		사회 주의 강성 대국	사회주의 강성국가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총로선상 목표) 완전승리	
	남 반부			반제 반봉건 민주 주의 혁명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NLPDR)		민족해방민주주의 (NLDR)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 인 발전	
최종 목적 (최대 강령)	공산주의 사회 건설			공산주의 사회 건설,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 주의화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		
최고 강령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출처: 저자 작성.

〈그림 2〉 북한 전국 혁명론의 당면목적-최종목적 변화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지금까지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에 이르는 9차례의 당규약 개정안 전체 분석을 통해 북한의 과도기론 규정과 관련된 전국 혁명론 변화를 분석하였다. 1946년부터 당규약의 장기적 변화의 맥락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그리고 최근 8차 당대회 조선노동당의 과도기론 규정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한 질문이다. 본 연구는 당규약 조항 중에서 특히 과도기론 규정을 다룬 당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 1970년부터 세부적으로 기술된 북반부 사회주의건설과 남반부를 포괄하는 조국통일 조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올해 당규약에서 북한의 ‘전국 혁명론’ 규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즉 당면목적에 기술된 북반부의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 ‘전국적 범위의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 최종목적으로 재설정된 ‘인민의 이상이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은 1차 당규약부터 살펴본 전국 혁명론적 규정과 비교해 북한의 과도기론 규정의 유연화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조국통일 세부 기술의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단계는 경제건설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설정한 김정은 정권이 “시대에 뒤떨어진” ‘남조선혁명론’ 규정의 수정을 통해 남북한의 공존, 일종의 국가연합 단계를 상정하는 데로 나아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⁵⁶

2014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채택과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국가발전전략의 확정, 2018년 4월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서 ‘경제발전 총력집중’ 노선 확립에 이르는 국내 경제개혁적 조치들은 2018년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한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협상과 함께 장기화된 민생고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고자 했던 정권의 의도를 보여준다.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비상방역체계에 따른 봉쇄의 장기화 국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에 근거한 ‘정면돌파전’을 제기, 전략적 억제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의 근본적 해결을 압박하고 있다. 2021년 당규약은 2019년 연말 이후 ‘새로운 길’의 전환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체제 확립의 필요를 당 조직기구 재편(당 중앙위원회에 집중된 일원적 체제,

⁵⁶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2면.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결정권 강화 등)에 반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조항에서 관찰되는 실용적 전환(‘선군 정치’의 삭제, ‘인민대중제일주의’ 강화, 당 활동 영역에서 군사보다 경제를 선행 배치)을 통해 김정은은 정권 초반부터 지속해온 개혁적 조치들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981년 ‘역사 결의’에서 ‘초급 단계’를 첫 언급한 이후 19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정식화하면서 “고난을 뚫고 자력갱생으로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1980년대 계획과 시장의 공존으로부터 1990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면적 도입(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소유제 개혁)으로 나아간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과 비교해, 2012년 권력승계 이후 김정은은 정권의 개혁개방적 조치들은 중국의 점진주의적 변화 경로를 따라가는 한편 소유제도 변화에 대한 완강한 반대, 이원적 은행 체계로 대표되는 금융개혁 지연 등 차이를 보인다.⁵⁷ 그럼에도, 2021년 조선노동당규약이 북반부 당의 당면목적으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규정, 중국공산당과의 ‘통약성’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혁명론’ 폐기를 통한 조국통일 규정의 연성화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이르는 과도기론 수정과 같은 실용적 변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제출: 11월 8일 ■ 심사: 12월 3일 ■ 채택: 12월 7일

⁵⁷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2016), p. 130, p. 145.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김성보·김예림 편. 『분단시대의 앓의 체제』. 서울: 혜안, 2016.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서울: 역사비평사, 2001.
- 김재웅. 『북한체제의 기원』. 서울: 역사비평사, 2018.
- 백영서·김대환 편. 『중국사회성격논쟁』. 서울: 창비, 1988.
- 백영철 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서울: 선인, 2006.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김정은의 전략과 북한』 세계정치 34. 파주: 사회평론아카데미, 2021.
-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이병천. 『북한학계의 한국근대사논쟁: 사회성격과 시대구분 문제』. 서울: 창작과비평사, 1989.
- 이석기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869, 2018.
- 이현정 편. 『개혁 중국: 변화와 지속』.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9.
-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서울: 창비, 2004.
- 이희옥·백승욱 편.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서울: 책과함께, 2021.
- 조선노동당출판사. 『조선노동당 규약 해설』. 도쿄: 학우서방, 1960.
- 조선노동당출판사 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1986.12.30.)” 『김일성 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4.
- _____. 『김일성 저작집』 21권.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
-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62』.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2.

Hoston, Germaine A. *The State, Identity, and the National Question in China and Japa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2. 논문

- 강혜석. “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17.
- 김선호. “1945~1946년 북한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혁명동력의 설정·배제.” 『한국 민족운동사연구』. 통권 92호, 2017.
- 김일한.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서유석. “북한사회주의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통일문제연구』. 통권47호, 2007.

- 안경모. “북한의 이데올로기 변화와 그 정치적 함의(1966~2012): 적응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9권 4호, 2015.
- 양문수.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중국과 비교의 관점.” 『아세아연구』. 제59권 3호, 2016.
- 이정철.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2.
- 정영철.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2권 1호, 2010.
- _____. “북한의 민족주의와 문화변용.” 『문화정책논총』. 제31권 2호, 2017.
- 정현숙. “‘사회주의 완전승리’ 테제와 북한의 경제노선 변화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 18권 3호, 2015.
- 조수룡. “정전 후 북한에서 사회주의 이행 논의와 정식화.” 『한국사연구』. 통권 190호, 2020.
- 한승대. “북한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개념사적 접근.” 『북한학연구』. 제8권 1호, 2012.
- 황주희·임재천.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와 ‘경제적 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 연구논총』. 제39권 3호, 2021.
- Evans, Jr., Alfred B. “Developed Socialism in Soviet Ideology,” *Soviet Studies*, Vol. 29, No. 3 (July), 1977.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Party Charter Revision at the Eighth Party Congress and Changes in the DPRK's Theory of National Revolution

Kim, Tae-Kyung and Lee Jung Chul

The revised party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t the Eighth Congress in 2021 reflects the Kim Jong-un regime's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the new strategic line, drawing our attention to changes in regulations related to North Korea's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n socialism and communism. This study analyzes the total revisions made to the party charter so far,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theory of transition reflected in the party's regulations. In existing socialist systems, the issue of transition was significant, in that the ideological interpretations of the transition period and proletarian revolution are directly linked to the post-revolutionary methodology of socialist construction. North Korea's theory of transition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socialism in North Korea as well as the revolution of 'national scope', which means national un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lauses in the party charter on the immediate objectives, the final goal of the revolution or socialist building, and the details on the methods of construction in the North and South. It also interprets changes in North Korea's transition theory in the context of economic reform measures and discourses under Kim Jong Un.

Key Words: Charter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Theory of Transition, Proletarian Revolution, Theory of National Revolution, Kim Jong Un Regime, New Strategic Line